

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양 현 봉**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서론
- II. 창업 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 III. 창업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 IV.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성과
- V. 창업정책 추진 효율화 방안

* 접수일(2018년 7월 9일), 1차 수정일(2018년 7월 27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28일)

** E-mail : 양현봉(hbyang@kiet.re.kr)

논문초록

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양 현 봉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 모두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에 2조 8,260억원(추경, 신용보증, 시도별 창업자금 융자 제외)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18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2017년도 신설법인 수가 9만 8,33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재정지원이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되고, 창업지원사업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창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이 촉진되고,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확충, 창업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재도전·재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창업, 창업 지원사업, 지식·기술집약형 창업, 효율화

경제학 문헌분류

M41, O32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tart-up policy promotion

Hyun-bong Yang

The start-up busin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giving vitality to the economy and creating jobs. Therefore,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concentrating policy efforts at the promotion of start-ups.

In Korea, 8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long with 17 local governments secured 2,826 billion won in financial in 2017, launching 180 projects.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 reached a record high of 98,330 in 2017, coinci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aggressive start-up policy. However, several inefficiencie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government's policy. In particular,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is based on directly supporting start-up firms,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start-up infrastructure. This complicates start-up support programs, which are mainly carried out by supplier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tart-up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start-ups, and create a virtuous circle in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t should develop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space for creators and technology workshops. Second, it should pursue a rational adjustment of start-up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start-up support project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education. Third, it must create a mentoring and consulting support system, establishing a systematic evaluation scheme and strengthening the feedback function, and develop a plan for vitalizing re-startups.

Keywords

start-ups, start-up support program, 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start-ups, Efficiency

JEL Classification

M41, O32

www.kci.go.kr

1. 서론¹⁾

창업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국이 창업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부처별·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창업지원사업도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별 자치단체가 18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7월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운영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제시하였으며,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은 혁신창업활성화에 있으며, 혁신창업은 벤처·창업을 주축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별 자치단체가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설법인 수의 경우, 2008년 50,855개에서 2012년 74,162개, 2017년에는 98,330개를 기록하는 등 창업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정책이 과연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가 2017년도에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그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고찰한 후 향후 창업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K-Startup)에 게재된 ‘2017 창업지원사업 자료’(2017.3)를 바탕으로, 부처별· 시도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금규모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다만, 2017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이관된 사업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2017년 3월

1) 본고는 필자가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슈페이퍼, 2018.4)과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KIET 월간 산업경제 7월호)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준으로 부처별 창업지원 자금규모 및 지원사업을 정리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창업자금 보증 및 보증연계형 투자사업도 현황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I. 창업 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지원 현황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에 2조 8,260억원의 재정자금을 확보(추경예산, 신용보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제외)하였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은 2조 7,572억원, 17개 시·도별 자치단체(지방정부)의 창업자금 17개 시·도의 창업자금²⁾은 688억원으로 나타났다.

〈 표 1 〉 창업지원 사업별 창업자금 규모(2017년 3월 기준)

(단위 : 억원)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행사· 네트워크	정책자금 융자	기타	합계
중앙정부	631.0	484.0	373.0	2,959.0	2,157.0	147.0	31.0	20,790.0	—	27,572.0
지방정부	15.3	276.2	3.0	41.0	—	15.3	6.8	—	330.9	688.5
합계	646.3	760.2	376.0	3,000.0	2,157.0	162.3	27.8	20,790.0	330.9	28,260.5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를 가공하여 작성하였다.

주 : 1) 시·도별 자치단체는 창업 R&D 자금이 없으며, 기타는 출자 및 패키지형 사업자금 규모임.

2)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중 재창업 지원자금은 재도전 R&D자금 50억원, 재창업 사업화자금 125억원, 재창업자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1,175억원으로 파악됨.

2017년 3월 기준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정책자금의 융자가 2조 79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73.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창업사업화자금이 3,000억원(10.6%), 창업 R&D자금이 2,157억원(7.6%), 창업지원 시설 및 공간 제공이 760억원(2.7%), 창

2) 17개 시·도의 창업자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출자 자금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만을 파악하였다.

업교육은 646억원(2.3%) 등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융자금이 전체의 63.3%인 1조 7,9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조금이 7,470억원(26.5%), 출자금은 2,890억원(10.2%)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 표 2 〉 지원형태별 창업지원 자금 규모(2017년 기준)

(단위 : 억원)

	보조	융자	출자	합계
중앙정부	6,782.0	17,900.0	2,890.0	27,572.0
지방정부	688.5	—	—	688.5
합계	7,470.5	17,900.0	2,890.0	28,260.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K-Startup), 「2017 창업지원사업」, 2017.3.

2. 재정지원의 문제점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창업 촉진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창업과 관련한 재정지원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창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테크숍, 메이커 스페이스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및 R&D, 사업화에 대부분의 재정자금을 지원하였다(<표 1> 참조).

셋째, 창업은 실패 위험이 높아 선진국의 경우 재도전이 원활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7년도 창업 지원 재정자금 중 재도전·재창업 자금이 전체 재원의 4.2%인 1,1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 창업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정부가 2017년에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은 89개 사업으로 파악되었다(〈표 3〉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소년비즈니스,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 재창업자금 등 3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K-Global 창업멘토링 등 25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등 4개 사업, 교육부에서는 대학창업 교육체제 구축 등 3개의 사업,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현장크라우드펀딩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가 2017년도에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창업교육 부문은 4개 부·청에서 창업아카데미 등 11개 사업, 시설·공간 부문은 3개 부처에서 창업보육센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멘토링·컨설팅 부문은 2개 부처에서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사업화 부문은 5개 부처에서 창업도약패키지 등 26개 사업, R&D 부문은 3개 부처에서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등 7개 사업, 판로·마케팅·해외진출 부문은 3개 부처에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사·네트워크 부문에서는 3개 부·청에서 벤처창업대전 등 8개 사업, 정책자금 부문은 5개 부처에서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사업

2017년도에 17개 시·도별 자치단체가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은 총 91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형별 창업지원사업은 〈표 4〉와 같다.

서울특별시에는 글로벌창업센터 등 6개 사업, 부산광역시에는 창업성장지원센터 등 7개 사업, 대구광역시는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광주광역시는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등 2개 사업, 대전광역시는 여성창업지원시설운영 등 8개 사업, 울산광역시는 지식기술창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는 대학생융합기술창업지원 등 12개 사업, 강원도는 청년창업프로젝트 등 10개 사업, 충청북도는 우수창업동아지지원 등 3개 사업, 충청남도는 청년CEO프로젝트 등 4개 사업, 전라북도는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등 4개 사업, 전라남도는 푸른돌청년상인육성 등 3개 사업, 경상북도는 청년CEO몰사업 등 4개 사업, 경상남도는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지원의 2개 사업, 제주도는 향토자

원활용형 창업지원 등 3개 사업, 세종시는 창업보육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3 〉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 (2017년)

유형	사업명	관련 부처	비고
창업교육	청소년비즈쿨, 창업대학원, 창업아카데미,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기업가센터, 장애인 및 충형 창업교육, 스마트창업터	중소기업부	보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문체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창업 교육체제 구축	교육부	
	IP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자금	특허청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제품 제작터, 장 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소기업부	보조
	K-Global 스마트콘텐츠허브 활성화 지원사업,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지원사업	과기정통부	
	게임벤처 3.0	문체부	
멘토링·컨설팅	K-Global 창업멘토링,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십,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액 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 육성·이노폴리스 캠퍼스, 우주기술 기반 벤처 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보조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클라우드펀딩컨설팅	농식품부	
	IP 디딤돌, IP 나래	특허청	
사업화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창업인턴제, 창업도약패키지,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상생서포터 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육성,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 램,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	중소기업부	보조
	K-Global Re-Start 민관투자연계 지원,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K-Global 공모전(일 반), K-Global 공모전(IoT 신제품 개발),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K-Global DB- Stars, K-Global 스마트 미디어,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K-Global 스타트업 다국적화 지원사업,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	과기정통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창업 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문체부	
	기술가치 평가	농식품부	
R&D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창조혁신형 재 도전 기술개발	중소기업부	보조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 K-Global SW 전문 창업 기획사,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과기정통부	
	농식품벤처창업 R&D 바우처사업	농식품부	
판로·마케팅·해외진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중소기업부	보조
	K-Global 해외진출사업, K-Global Re-Startup 현지화 지원, K-Global 데이터 글로벌,	과기정통부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식품부	

유형	사업명	관련 부처	비고
행사·네트워크	벤처창업대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대한민국 창업리그, 여성 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부	보조
	2017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식품부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발명특허대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우수상표·디자인권 공모전)	특허청	
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 전용 창업자금), 시니어 창업보증,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 매칭펀드	중소기업부	융자, 출자, 보증
	창업기업 보증, 퍼스트펍 창업기업 보증, 기술창업기업 보증, 예비창업자 보증	금융위원회	보증
	K-Global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	과기정통부	융자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 펀드	농식품부	출자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K-Startup), 「2017 창업지원사업」, 2017.3에서 정리

〈 표 4 〉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사업 (2017년)

유형	사업명	시·도	비고
창업교육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부산	보조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장애인창업교육활성화 지원	대전	
	지피지기창업성공사업	인천	
	창업베이스캠프 운영	경기	
	창업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강원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	충북	
	4050 행복창업프로젝트	전북	
	대학벤처창업동아리 육성	전남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제주	
시설·공간	창업카페 운영, 창업 허브, 디지털대장간 운영, 글로벌 창업센터, 앰비즈니스센터 운영	서울	보조
	센텀기술창업타운 조성 운영, 창업 카페 지원	부산	
	청년 ICT창업성장센터 운영,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섬유·패션디자인 BI 지원, 북구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화관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구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광주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대전	
	여성 창업지원, 벤처창업센터 운영, 경기문화창조 허브 운영	경기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전남	
	경북 북구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경북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남	
	창업보육 지원사업	세종	
멘토링 컨설팅	기업경영자문단, C-Lab 엑셀러레이팅	대구	보조

유형	사업명	시·도	비고
사업화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	부산	보조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경기	
	창업꿈나무 사업화	전북	
	청년 CEO 육성	경북	
판로 마케팅 해외 진출	창업기업 오프라인 판매장 구축	부산	보조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	경기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충남	
	청년 CEO몰 사업, 청년창업제품 판로 개척	경북	
행사· 네트 워크	대구창조경제리더스 포럼,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대구	보조
	대덕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경쟁력강화사업	대전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충북	
패키지형 지원	아스피린센터	서울	보조
	창업성장지원센터	부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광주	
	맞춤형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대전	
	청년CEO 육성사업, 제조업창업공간특화팩토리 운영사업, 오프라인매장특화스트리트 운영 사업, 지식기술창업 지원사업, 청년스타기업육성사업	울산	
	창업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창업 지원, 광고 경기문화창조 허브운영, 대학생 융합기술 창 업 지원, 북구 경기문화창업 허브운영	경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운영, 청년창업 프로젝트	강원	
	창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	충북	
	중장년 재도약 창업프로그램, 청년 CEO 프로젝트	충남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지식서비스),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기술기반)	전북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전남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제주	
기타	창업보육 경쟁력강화 사업	대전	보조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프로젝트 사후관리	강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충남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지원	경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K-Startup), 「2017 창업지원사업」, 2017.3에서 정리

주 : 시·도의 창업지원사업 중 출자·융자사업은 14개이며, 상기 표에 명기하지 않음.

3.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이 여러 부처와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잡·다기하고,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 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가 전체적으로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창업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나, 특히 사업추진 프로세스 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동아리 등 창업교육사업과 창업보육사업, 창업 이후의 멘토링·컨설팅사업, 정책자금 지원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기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멘토링·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나 창업기업 성장단계에 부응한 지원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 지향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상당수의 사업들이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창업교육의 경우, Maker 창업교육(Learning by Making)이 선진국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입식·성공기업가 사례강의 중심의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경우, 투융자복합금융이나 투자연계형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융자(보증)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에서 스핀오프(Spin-off) 방식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BI(Business Incubator) 확충이 필요하나, 여전히 대학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넷째, 창업지원사업들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와 모니터링, 피드백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창업지원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비해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부처별로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성과

1. 개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업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성과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창업지원사업 성과 분석과 관련한 시계열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창업지원 미수혜기업과 성과를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지원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 관련 통계자료 중에서 활용 가능하고, 상호간 비교 가능한 지표(고용창출, 생존율 등)의 변화 등과 같은 단순 기초통계량만을 활용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개괄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장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개략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1.1. 활용 통계자료

본장에서는 분석에 활용할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일반 창업기업의 고용창출과 생멸 등은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³⁾의 시계열자료를, 정부지원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생멸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발표하는 「창업지원기업이력·성과조사」⁴⁾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1.2. 주요 활용 지표

본장에서는 일반 창업기업과 정부 지원 창업기업 간의 고용창출, 생존율 등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기업이력·성과 조사」자료 중 비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상기 통계자료의 조사내용 중 일반 창업기업과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성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공통 지표를 검토한 결과, 분석에 활용 가능한 지표로 고용창출, 생존율, 가젤기업 배출 실적이 선정되었다.

3) 통계청이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에서 제공하는 가공 데이터는 활동기업 수, 종사자수, 신생기업 생존율, 신생·소멸률, 고성장기업, 가젤기업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국세청 통계를 이용한 통계치이므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변화추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 현황 및 성과 파악에 적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창진원)가 「창업지원기업이력·성과조사」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이력·성과조사 내용은 일반현황(종사자수 등), 생존현황, 고용 및 혁신 성과, 고성장기업(가젤기업)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지원 창업지원사업 관련 통계자료로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은 정부의 창업 재정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 창업지원기업에 대한 성과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2.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성과

2.1. 고용창출 성과

정부가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대표적 성과로는 생산과 함께 고용창출 등으로 나타난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603만명으로 2012년(587만명) 대비 2.7% 증가하였다⁵⁾.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44.9%를 차지하여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규모와 활동기업 대비 고용창출 비중⁶⁾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창업(신생)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0%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9%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에서 연도별 활동·신생·소멸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규모를 살펴보면, 활동기업은 2012년 기준 총 1,715만명에서 2016년 1,929만명으로 214만명의 고용인원 수 증가를 나타냈다.

창업(신생)기업의 고용인원 수는 2012년 기준 총 125만명(기업당 평균 1.6명)에서 2016년 133만명(기업당 평균 1.5명)으로 약 8만명의 고용인원 수가 증가하였다. 즉, 창업(신생)기업의 전체 고용창출 수는 창업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수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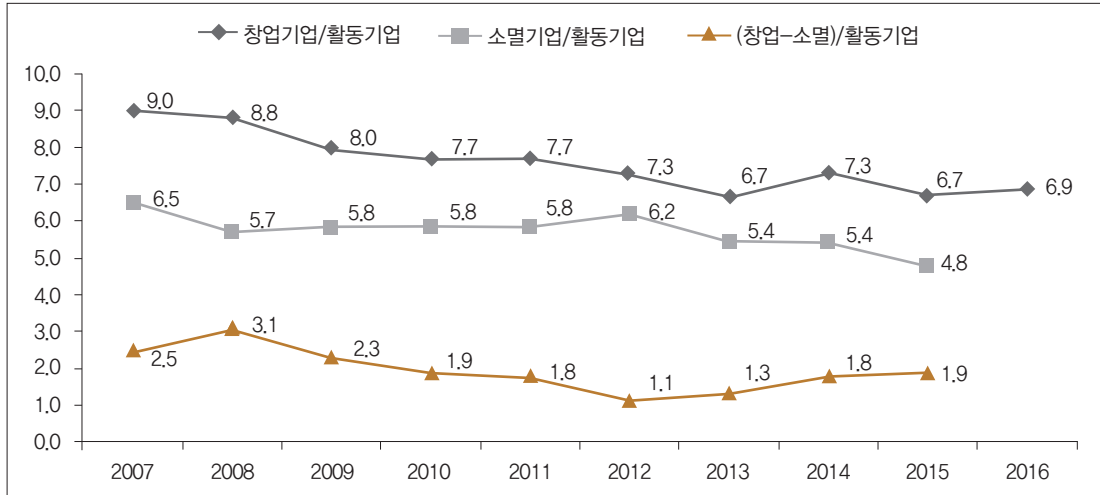
폐업(소멸)기업의 활동기업 대비 고용인원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08년 5.7%로 하락한 이후 2011년까지 5.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생멸(신생-소멸 기업)에 따른 순 고용(종사자 수) 창출 효과는 2008년 3.1%에서 2010년 1.9%, 2011년 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이후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6.07.20.), 201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주요결과

6) 활동기업에 대비한 신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의 종사자 수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그림 1 〉 활동기업 대비 창업(신생)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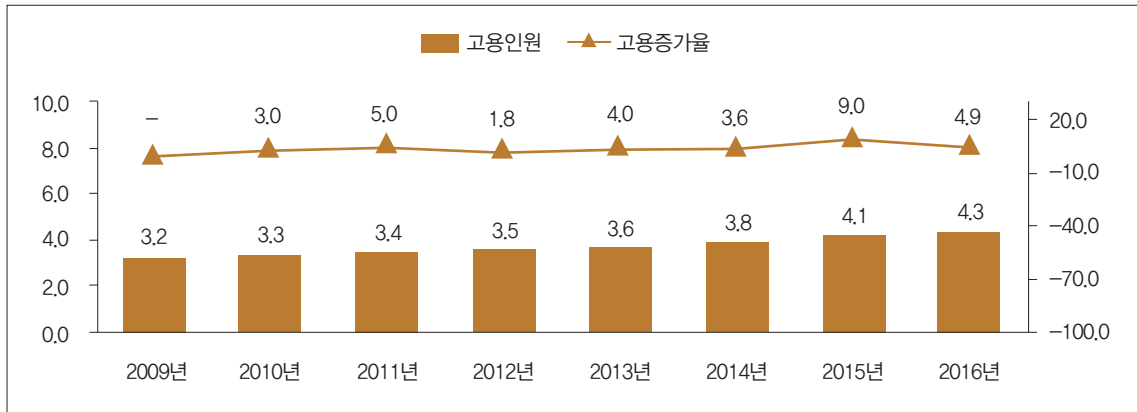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7)의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와 조덕희(2014)의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가 실시한 「2017년창업지원기업이력·성과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로부터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가 2009년 3.2명에서 2011년 3.4명, 2013년 3.6명, 2016년에는 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미수혜한 대다수 일반 창업(신생)기업의 평균 종사자수(고용)가 다소 감소 추세인 것에 비교해 볼 때,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성과 기술·지식집약도가 높아 우수한 고용창출력을 가진 창업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2 〉 정부 창업지원에 따른 연도별 고용 현황

(단위 : 명,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2017년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 · 성과」, 2017.12.

2.2. 고성장기업(가젤기업) 배출 성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 창출 및 고용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 특히 창업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6년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고성장기업 중 가젤기업⁷⁾ 배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일반 창업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형 및 매출 창출형 가젤기업 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에 비해 정부(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가젤기업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⁹⁾

이처럼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에서 가젤기업이 더 많이 배출된 것은 정부(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의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7) 고성장기업은 당해 년도에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고성장기준(상용근로자, 매출액, 상용근로자&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며, 가젤기업은 고성장기업 중에서 창업 이후 5년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8) 일반 창업기업 : 일자리 창출 가젤기업 수 : 2011년 1,785개 → 2016년 1,721개, 매출액 창출 가젤기업 수 : 2011년 3,820개 → 2016년 3,704개

9) 정부 지원 창업기업 : 일자리 창출 가젤기업 수 : 2013년 98개 → 2016년 135개, 매출액 창출 가젤기업 수 : 2011년 5개 → 2016년 139개

이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생계형 업종보다는 지식·기술집약도가 높은 고성장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5 〉 우리나라의 가젤기업 현황

(단위 : 개)

	일자리 창출 가젤기업			매출액 창출 가젤기업		
	2011	2013	2016	2011	2013	2016
일반기업	1,785	1,770	1,721	3,820	3,222	3,704
정부 지원기업	—	98	135	5	103	1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K-Startup), 「2017 창업지원사업」, 2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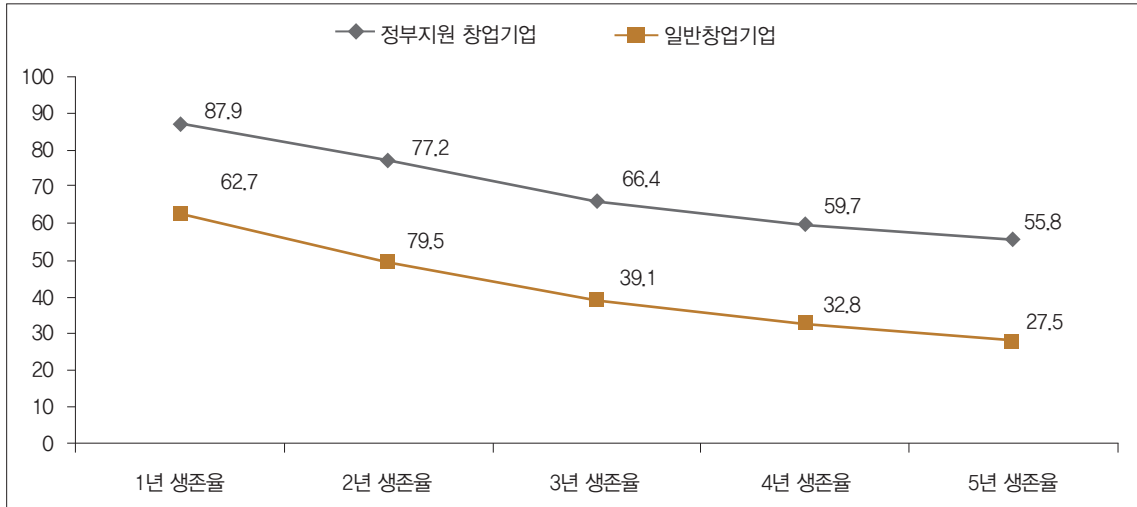
2.3. 생존율 제고 성과

창업기업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과 높은 연관성을 갖게 되어,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관련한 통계청(201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창업(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 3년 생존율은 39.1%, 5년 생존율은 27.5%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에 비해 2016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지원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87.3%, 3년 생존율은 66.4%, 5년 생존율(2011년 지원 기업의 생존율)은 55.8%로 나타나,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창업 생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여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정부는 기술·지식기반 유망 창업자 발굴에 주력함과 아울러,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3 〉 창업지원기업의 생존율(2016년 기준)

(단위 : %)



자료 : 창업진흥원,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2017.12.

주 : 1) 생존율은 1~5년 전에 신생한 기업이 기준년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2) 일반창업기업은 통계청(2017)의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이며, 생존율은 2015년 기준임.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창업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 등의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창업 업종의 고도화 및 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신규 창업으로 인한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창업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창업기업당 고용인원이 2009년 3.2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지식·기술집약형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에 주력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혁신형 창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자금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만성적 자금난으로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창업 초기단계 기업이 M&A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창업기업들이 창업 이후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자금 투자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금,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고성장 가젤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성장하는 기업 및 가젤기업이 높은 성장성과 고용 창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젤기업이 갖는 높은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을 고려해볼 때, 향후 TIPS 프로그램¹⁰⁾ 확충 등을 통해 가젤기업 육성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가젤기업의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장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일반 창업기업과 정부지원 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나, 정부지원 창업기업의 성과 관련 통계자료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지원기업에 한정된 관계로 우리나라 전체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V. 창업정책 추진 효율화 방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업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 결과 앞서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기업의 고용창출, 생존율 제고, 고성장(가젤)기업 발굴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기술·지식집약도가 비교적 높은 유망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지원 재정운용에 있어 재도전·재창업 지원이 미흡하고, 창업인프라 확충보다는 정책자금 융자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복잡·다기한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와 모니터링 기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었다.

10) TIPS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단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성공벤처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발하고, 엔젤투자자와 연계한 정부 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장에서는 향후 창업 재정지원 및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창업정책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

일자리 창출이 국정운영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향후 창업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은 단기적으로는 창업의 저변 확충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성장기업 배출을 통한 질 좋은 고용창출과 기술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재편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창업정책의 방향은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되, 몇 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창업인프라 확충, 민간의 활력(엑셀러레이터 등) 도입 등을 통한 창업생태 환경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생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공급자 위주 창업지원에서 향후에는 창업환경 조성 및 창업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지원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업정책에 대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추진, 그리고 평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창업정책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비용(High cost) - 고위험(High risk) 방식의 창업에서 향후 저비용(Low cost) - 저위험(Low risk)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발 스핀오프(Spin-off)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정책과제

2.1. 정책 수립 단계

창업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보다 높은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올바른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활성화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창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예: 출연·출자·보조사업 100억원, 용자사

업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예비타당성 검토 또는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사 전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창업정책의 대상이 대학(원)생 및 청년에 집중되어 왔으나, 기대했던 것처럼 지식·기술창업 기업 수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청년층과 함께 기술·지식 보유자를 창업으로 유도하는 숙련창업¹¹⁾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 단지 소재 대·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인재 중 창업 희망자를 스핀오프(Spin-off) 방식에 의한 창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낮은 비용((Low cost)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프라 확충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와 보조금 위주의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창업예비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aker space(메이커 스페이스), Tech shop(테크숍), Fab lab(팹랩) 등 창업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융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운용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2.2. 정책 추진 단계

창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시·도별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체계를 수요자(창업기업) 측면에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TP)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능한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창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가 복잡하고 유사하게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여타 부처, 시·도별 자치단체가 (가칭)‘창업지원사업조정위원회’구성을 통해 단순화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창업지원사업이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 추진 단계별로 연계성 있는 지원사업이

11) 숙련창업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나, 통상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뒷받침되도록 하고, 창업지원 프로세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등에 대해 창업멘토링,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등의 수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우수창업동아리 등의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창업자금 연계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창업교육사업의 경우는 주입식·성공기업가 사례 중심의 교육에서 실전형(Learning by Making)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은 창업 현장에서 학력 제한 없이 금형, 코딩 등 특정 기술 분야 전문가 및 전문경영인도 멘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금 지원방식은 융자와 보증 위주 지원에서 투·융자복합금융, 투자연계형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운용방식을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지식창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공단, 민간액셀러레이터 등에게도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도전·재창업을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부도에 직면하기 이전에 기업청산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¹²⁾과 함께 재창업(재도전) 전문 멘토링·컨설팅사업 도입, 재창업 지원재원의 확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3. 정책 평가 단계

올바른 창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함께 중요한 것이 정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와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 추진에 따른 피드백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성과관리 또한 미흡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개발·관리가 필요하나, 상당수의 창업지원사업들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해당 창업지원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동 성과지표를 성과관리(사업평가)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자체평가위원회, 용역과제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요인의 하나로 해당 부처의 자발적 제도개선에만 의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예: 정책연구기관)에 의해 객관적 사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평가결과가 다음 년도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용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2018), 「청년 일자리 대책」
2. 관계부처 합동(201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3. 관계부처 합동(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7-1)
4. 관계부처 합동(2010),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6. 양현봉·한창용(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7. 양현봉·박종복(2014),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8. 양현봉·박종복(2013), 「창업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10.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11. 양현봉·박종복 외(2009),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분석」, 산업연구원
12. 정만태 외(2012),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13. 조덕희(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성과 및 과제」, 산업연구원
14. 조영삼·양현봉 외(201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1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K-Startup), 「2017 창업지원사업」, 2017.3.
16.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각 연도
17. 중소기업청(2014), 「창업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집」
18.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6),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기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연구」
19.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7),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0.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21. 창업진흥원(2016),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22.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각 연도
23. 허문구·양현봉 외(2018),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스코어보드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 산업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